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의 차이와 그 함의 (1970~2016) —부산을 중심으로—

김 대 래*

| 목 차 |

- I. 서론
- II.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
- III.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의 차이와 시사
- IV. 두 계열 인구 차이의 연령대별 검토
- V. 결론

| 국문초록 |

한국의 공식인구통계는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 그리고 인구센서스가 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추계인구이며 인구센서스는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가와 달리 지역차원에서는 이러한 인구 통계 사이에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전에 주목하여 부산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부산의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았고,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었

* 신라대학교 경제금융학전공 교수 / drkim@silla.ac.kr

다.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사이에 역전이 나타난 것은 1989년이였다. 한편 두 계열의 인구통계에서 성비는 1988년이 전환점이였다. 크게 보아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클 때에는 추계인구에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많거나 같았고,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을 때는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적었다. 또한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에서는 1989년이 전환기였는데, 1988년까지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고, 1989년부터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았다. 전입>전출이었던 시기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였고, 전입<전출이었던 시기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의 관계를 보였다.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는 1975년과 1985년에는 0~4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많은 연령대는 15~19세였다. 교육 때문에 부산으로 들어오고 또 출생등록을 늦게 하고,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전입한 사람들이 아직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다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어지는 시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계열 인구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부산이 젊은 층은 물론 모든 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부산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 주민등록인구, 추계인구, 인구센서스, 부산, 성비, 전출입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부산은 우리나라 대도시 가운데 저출산¹⁾-고령화²⁾의 경향이

1) 2018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부산의 조출생률(천명당)은 5.6명으로 전국평균 6.4명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전국 7대 도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다. 자연증가율도 -1.0%로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검색일: 2019.11.18.)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그리고 소득 등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뒤에 놓여있다. 과거의 주력산업 붕괴이후 부산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산인근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과 함께 경제의 광역화가 이루어진 것도 인구감소를 부채질 하였다.

역으로 경제개발 초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중심지였던 부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드는 인구로 인해 그야말로 부산은 북새통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시절을 겪다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다.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출생과 사망 그리고 전입과 전출 등 인구측면에서의 변화는 서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인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사회의 생산요소 및 인적자본으로 기능하는 한편 그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담지하고 이어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인구는 단순히 출생, 사망, 이동과 같은 요인만이 아니라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부산의 인구 변동과 추이가 1989년을 전기로 앞뒤로 구분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작성되었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부산인구가 증가에서 감소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1996년부터이지만 사실

2) 2018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부산의 노령화지수는 149.8로 전국평균 111.9를 크게 상회함은 물론 전국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도 높다. 2018년 인구성장율도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는데, 부산은 -0.71%로 서울의 -0.64%보다 낮다.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 2019.11.18.)

상 부산인구의 전환은 1989년을 전기로 이루어졌다. 지역의 확대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한 증가가 아니었다면, 1989년부터 주민등록 기준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1989년에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전입인구가 부산에서 타시도로 나가는 전출인구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였다. 물론 이러한 인구전환의 근거에는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이제까지 거의 분석되지 않았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구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두 계열인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사이의 차이가 어떤 추이를 보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는 큰 차이가 없어야 할 두 계열 인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이의 역전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차이와 역전을 가져온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사회경제적 이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부산의 인구를 다루고 있지만 인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사의 검토

인구통계의 중요한 두 계열인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는 뒤에서 검토하듯이 원래 완전한 것은 될 수 없다. 추계와 조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차가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계열의 인구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구의 조사와 추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두 계열의 통계를 검토하는 것은 좀 다르다. 국가간에는 국경이 있어 인구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

럽지만 국내 각 지역간에는 이동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이 인구 통계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데에는 어떤 지역에서 향후 오랫동안 거주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 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국내 각 지역 단위에서는 인구통계의 편차가 전국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차원에서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 차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부산을 대상으로 두 계열 인구의 차이와 그 추이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에 주목한 시론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그야말로 문제제기 차원에 그쳤을 뿐이다.³⁾

두 계열의 인구를 비롯하여 인구통계들 사이의 문제점을 검토한 연구로는 김종태의 연구가 있는데, 모두 전국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통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선 0~6세 사이의 인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김종태는 1998년부터 집계된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는 0세 혹은 출생아가 연령상승에 따라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6세 혹은 7세가 되는 해에 최대로 되었다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처럼 출생아수보다 이후 인구가 더 많은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1998~2005년 사이의 장래인구추계 0세 인구는 과대추정이 된 반면에, 2006~2008년의 0세 인구는 과소추정 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⁴⁾

3) 김대래, 「부산인구의 시외 진출입과 그 함축성(1970~2012)」, 『2015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34~336쪽.

한편 김종태의 또 다른 연구는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의 주민등록 인구와 장래인구추계의 추이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주민등록인구가 장래인구추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2015년도 연령별 인구를 비교한 결과 33개 연령대에서는 장래인구추계가 주민등록통계인구보다 많았고, 68개 연령대에서는 장래인구추계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었다.⁵⁾ 그리고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 모두 여러 해에 걸쳐 나이가 증가하는데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보였다. 주민등록인구의 경우 2008~2015년 사이 각 연도에서 0~12세 인구의 경우 나이증가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추계인구는 2010~2011년 사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나이가 증가할 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⁶⁾ 공식적인 인구통계 조차 적지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근영·김순관·이신해⁷⁾는 수도권 1,14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즉 짝을 이룬 표본의 차에 관한 가설검정을 통해 1995년과 2000년 자료에서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자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계인구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단위에서 인구통계 계열간 차이는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김종태, 「주민등록 0~6세 인구의 역추정과 기존 인구통계와의 출생아수 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6, 2009, 1145~1153쪽. 6~7세 인구수가 최대에 이르는 것은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 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종태, 위의 논문, 1146쪽.

5) 김종태, 「공식인구통계들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8-1, 2017, 101쪽.

6) 김종태, 위의 논문, 2017, 107쪽.

7) 김근영·김순관·이신해, 「Comparing Census Data with Resident Registration Data With Respect to Population and Household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수도권지역 인구와 가구에 대한 인구주택센서스 자료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의 비교연구)」, 『국토계획』 38-1, 2003, 237~249쪽.

II.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

1. 인구통계의 계열

한국의 공식인구통계(official demographics)는 주민등록인구(population statistics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residence population)와 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 그리고 인구센서스(population census)가 있다.⁸⁾ 우선 각 인구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민등록인구통계⁹⁾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매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작성된다.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인구를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작성대상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및 세대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이다. 주민등록 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은 감안되지 않는다. 반면 내국인 중 거주불명 등록자와 장기유학, 해외취업자는 실제로 국내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이처럼 국외 장기체류자 혹은 외국 영주권자들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는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많게 나타나 는 문제가 있다.¹⁰⁾

8) 김종태, 앞의 논문, 2017, 99~100쪽.

9) 주민등록인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10)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18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단기체류하면서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출국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현지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뒤 외교부(재외공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 중심으로 이주 여부를 파악한다. 이주 신고

인구센서스는 인구총조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년 마다 한번 씩 조사를 한다. 조사원들이 일일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다. 주민등록지가 어디이든 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 인구총조사이다. 그런 점에서 인구총조사가 실제의 인구에 매우 가까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조사시점은 11월 1일 현재 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 대상이 된다.¹¹⁾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시점의 인구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추계인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가 끝나는 다음해에 인구센서스 통계와 주민등록인구와 출생률, 인구동태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하는 것으로, 인구총조사와 주민등록인구가 가진 결함들을 보완하여 실제 인구를 추정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추계인구를 구하는 방법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추계인구는 기준일이 7월 1일 연앙(年央)인구로, 과거인구에 대한 확정인구(population estimates)와 향후 인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고려하여 작성된 장래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로 구분된다.

이러한 인구통계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작성되지만 고유의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즉 인구총조사는 상세하긴 하지만 조사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누락과 중복 등의 오차가 생겨날 수 있으며,

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장기 출국 중인 내국인과 같이 관리된다(『서울신문』 2019, 2. 16.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 11) 그러나 해외 취업·취학중인 사람,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원로 채용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 및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취업, 유학, 외교관 등이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국인 모두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취업자나 유학생 등은 조사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는 파악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신고의 지연 등으로 인해 누락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¹²⁾ 그리하여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인구총조사와 인구동태 통계자료 등의 여러가지 기초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실제적인 인구를 추정한 것이 추계인구이다.¹³⁾

그렇기 때문에 세 계열의 인구통계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전국통계를 통해 먼저 살펴보자. 우선 3계열의 인구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주민등록인구이고 그 다음이 추계인구이며 총조사인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계-총조사인구)/추계의 비율은 1~2%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주민-추계)/주민인구 역시 1~2%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주민-총조사)/주민인구의 비율은 3~5%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민인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인구를 포함한 반면 총조사인구는 해외취업이나 유학 등의 인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주민등록인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는 1998년 이후에 제공되고 이전에는 없었다. 둘째, 2003년의 5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은 1998년에서 이후 0세 인구 혹은 출생아는 6세 혹은 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최대치에 이르고 7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이론적으로는 출생아수가 최대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국외 장기체류자 혹은 외국 영주권자들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인구는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나타낸다. 넷째, 2008년부터 주민등록인구가 통계청에서 행정자치부로 옮겨가면서 2008년 주민등록인구에서 24~43세까지 즉 20개의 연령층의 인구가 일제히 2007년의 연령상승되기 전의 인구보다 증가되었다. 김종태, 「주민등록 0~6세 인구의 역추정과 기존 인구통계와의 출생아수 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6, 2009, 1146쪽.

13)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까지의 장래인구를 추계 공포한 후, 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결과가 집계되면 이를 토대로 7월 1일 현재의 연앙추계인구를 새로이 작성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통계 계열간 차이의 비율은 대체로 1~5%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나라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절대치로 보면 2010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총조사인구의 차이는 2,524,905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2005년에는 약 170만명의 차이를 보여 2010년보다는 좀 적었다.

<표 1> 전국의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 및 추계인구(명, %)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	추계인구	추계-총조사(A)	추계-주민(B)	주민-총조사(C)	A/ 추계	B/ 주민	C/ 주민
1970	31,435,252		32,240,827	805,575			0.02		
1975	34,678,972		35,280,725	601,753			0.02		
1980	37,406,815		38,123,775	716,960			0.02		
1985	40,419,652		40,805,744	386,092			0.01		
1990	43,390,374		42,869,283	-521,091			-0.01		
1995	44,553,710	45,858,029	45,092,991	539,281	-765,038	1,304,319	0.01	-0.02	0.03
2000	45,985,289	47,732,558	47,008,111	1,022,822	-724,447	1,747,269	0.02	-0.02	0.04
2005	47,041,434	48,782,274	48,184,561	1,143,127	-597,713	1,740,840	0.02	-0.01	0.04
2010	47,990,761	50,515,666	49,554,112	1,563,351	-961,554	2,524,905	0.03	-0.02	0.05
2015	51,069,375	51,529,338	51,014,947	-54,428	-514,391	459,963	0.00	-0.01	0.01

자료: KOSIS 각 연도에서 작성

주: 1. 추계인구는 중위추계 기준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는 1992년부터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전국의 경향과 비교할 때 부산의 계열간 인구추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는 부산의 3계열의 인구추이를 5년 단위로 정리한 것인데 전국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총조사인구는 주민등록인구보다 대부분의 시기에 더 적었으며, 추계인구는 총조사인구보다 모든 시기에 더 많았다. 이것은 전국과 같은 경향이다. 그런데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는 매우 특징적인 추이를 보여주는데, 1990년까지는 추계인구가 더 많다가 1995년부터는 주민등록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역전되고 있다.¹⁴⁾ 전국의 인구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추계인구>총조사인구의 관계가 부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2> 부산의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 추계인구의 비교(명, %)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	추계인구	추계-총조사 A	추계-주민 B	주민-총조사(C)	A/ 추계	B/ 주민	C/ 주민
1970	1,876,391	1,842,259	2,045,828	169,437	203,569	-34,132	0.08	0.11	-0.02
1975	2,450,125	2,453,173	2,625,143	175,018	171,970	3,048	0.07	0.07	0.00
1980	3,156,931	3,159,766	3,309,338	152,407	149,572	2,835	0.05	0.05	0.00
1985	3,512,113	3,514,798	3,627,990	115,877	113,192	2,685	0.03	0.03	0.00
1990	3,795,892	3,798,113	3,803,334	7,442	5,221	2,221	0.00	0.00	0.00
1995	3,809,618	3,892,972	3,852,295	42,677	-40,677	83,354	0.01	-0.01	0.02
2000	3,655,437	3,812,392	3,732,630	77,193	-79,762	156,955	0.02	-0.02	0.04
2005	3,512,547	3,657,840	3,590,291	77,744	-67,549	145,293	0.02	-0.02	0.04
2010	3,393,191	3,600,381	3,476,658	83,467	-123,723	207,190	0.02	-0.03	0.06

자료 : KOSIS 및 『부산통계연보』 각 연도에서 작성

주 : 1. 추계인구는 중위추계 기준 2. 1990년까지는 상주인구 기준, 1991년부터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2.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의 비교

전국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산의 두 계열의 인구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우선 부산의 두 계열의 인구통계는 통계청(KOSIS)과 『부산통계연보』에서 구할 수 있다. 통계청의 추계인구는 2017년 6월 공표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주인구¹⁵⁾

14) 여기서는 총조사인구와의 비교를 위해 5년 단위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검토하듯이 실제로는 1989년부터 주민등록인구가 더 많은 경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다 1990년에 다시 추계인구가 더 많게 되었다가 1991년부터는 주민등록인구가 추계인구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된다.

15) 상주인구는 인구조사 시점에서 특정한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개념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주간에만 거주하는 인구인 주간 인구에 대비하여

이며, 201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다.¹⁶⁾ 『부산통계연보』의 경우 1990년까지는 상주인구 기준이며 1991년부터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이다. 그런데 1990년까지의 상주인구가 부산시 차원에서 새롭게 조사하여 수정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인구와 사실상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인구의 조사시점은 12월 31일이다. 두 계열의 자료 모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5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분석을 하였다.

두 계열의 인구추이를 그린 것이 <그림 1>이다. 출발점인 1970년¹⁷⁾의 경우 추계인구는 2,045,828명이었고 『부산통계연보』 인구는 1,842,259명이었다. 추계인구 상으로는 1970년에 이미 부산인구는 2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산통계연보』에는 1972년이 되어야 2백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70년 두 인구계열의 차이는 20만명이 넘는다. 두 계열 인구의 차이가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1970년대를 통하여 추계인구는 『부산통계연보』 인구보다 매우 많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1973년의 경우 차이는 무려 314,259명에 달했다.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만명 넘게 더 있었다는 것이다. 1973년의 차이가 매우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 두 계열의 인구차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관된 특징이었

상시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개념이다. 도시화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도심에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훨씬 많게 된다.

- 16) 추계인구는 2017년 6월에 공표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추계인구는 1970~201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다.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이다. 원래 추계인구는 인구총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다음해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2019년 3월에는 이례적으로 특별추계인구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특히 저출산으로 기존의 추계인구와 실제인구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 17) 1970년부터 분석한 것은 추계인구가 1970년 이후 제공되기 때문이다.

다. 1970년대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 차이가 20만명을 넘었던 연도가 4개 연도이며, 1980년대 중반까지 10만명대의 차이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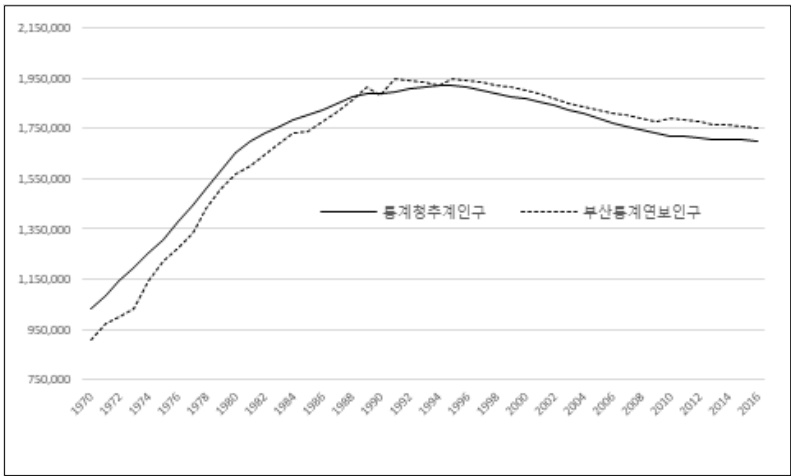
<그림 1> 통계청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 추이(명)

그러다 추계인구가 『부산통계연보』 인구보다 적어지는 것은 1989년이었다. 1990년 약간의 반전이 있긴 하였지만 1989년은 두 계열의 인구 추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1989년 이후 추계인구는 『부산통계연보』 인구보다 지속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여주는데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그 차이는 123,723명에 이르고 있다. 2010년 부산에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보다 123,723명이나 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이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추계인구는 주민등록인구보다 10만명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89년을 전기로 그 이전에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살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부산의 주민등록자

보다 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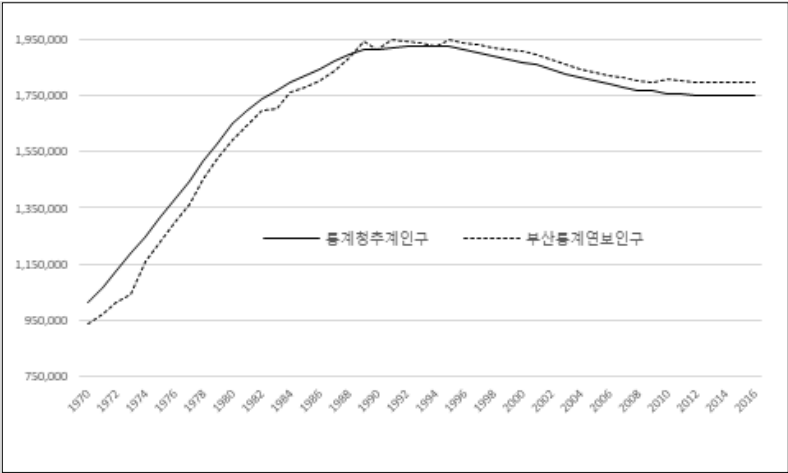
<그림 2>는 두 인구계열의 남자인구 추이를 그린 것이다. 남자인구 또한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두 계열 간에 차이가 있으며 1989년을 전기로 바뀌고 있다. 1970년대 추계남자인구는 『부산통계연보』의 남자인구보다 거의 매년 10만명 이상 많았다. 그러다가 1989년 이후에는 주민등록남자인구가 추계남자인구보다 더 많아지는데 그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남자인구에서 추계인구보다 주민등록인구가 5만명 이상 더 많다.

여자 인구의 추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989년을 전환점으로 여자인구에서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더 적어지고 있다. 그런데 두 계열의 성별 인구 차이를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 쪽이 좀 더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을 하나의 그림에 그린 것이 <그림 4>¹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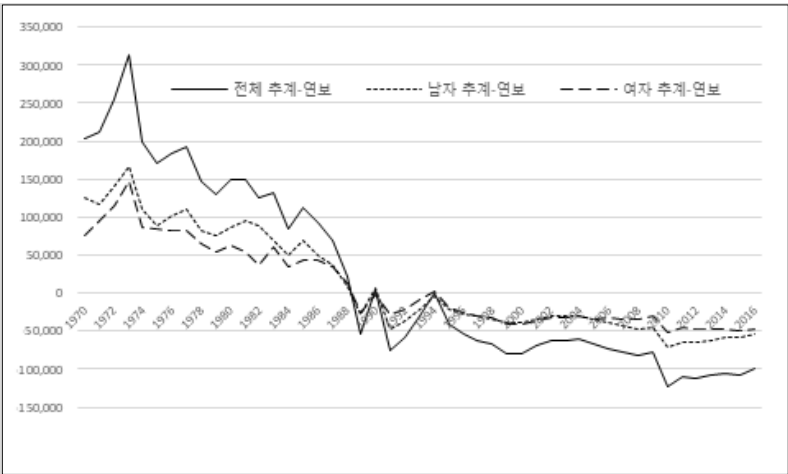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청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의 남자인구 추이(명)

18) <그림 4>에서 ‘추계’는 통계청추계인구를 ‘연보’는 『부산통계연보』 인구를 말한다.



<그림 3> 통계청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의 여자인구 추이(명)



<그림 4> 통계청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차이(명)

1989년을 전기로 이전과 이후의 흐름이 정확히 반대로 나타난다. 그

리고 1970~80년대의 20년간의 추이가 1990년 이후 기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1970~8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인구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모든 시기 두 계열 인구의 차이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차이는 성별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인구이동에 반영된 활동이 더 활발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의 차이와 시사

두 개의 인구계열에서 나타나는 인구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3가지 각도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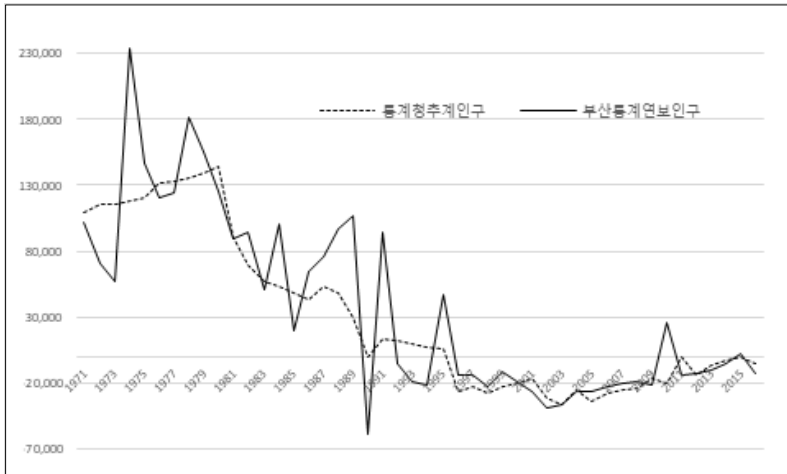
1. 인구 증감

<그림 5>는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에서의 증감을 본 것이다.¹⁹⁾ 두 계열의 증감인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4가지이다.

첫째, 추계인구의 증감은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증감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마치 『부산통계연보』 인구증감 자료를 이동평균한 것과 유사하다. 그에 반해 『부산통계연보』 인구에서의 증감은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74년 『부산통계연보』 인구에서는 234,091명의 증가가 있었다. 한 해만에 구(區) 하나 크기 만큼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추계인구 기준으로는 118,690명의 증가가 있었다. 『부산통계연보』 인구 증가의 절반 수준이다. 추계인구가 실제인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차이가 시사하는 것

19) 증감율로 보아도, 좌표만 달라질 뿐, 그림은 똑 같다.

은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고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대단히 많았으며, 이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 한꺼번에 주민등록에 올릴 경우 갑작스런 주민등록인구 증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추계인구와 통계연보의 인구증감(명)

둘째, 추계인구 기준으로는 1970년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였는데, 1980년에는 143,822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증감인구는 큰 진폭을 보였으며 1974년에는 234,091명에 달했지만, 그 전해인 1973년에는 56,788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추계인구와 같다. 1970년대 부산은 전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는데, 추계인구는 1980년까지 인구흡인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주민등록인구로 보면 1970년대 내내 많은 외부인구를 흡인하였지만 특히 1974년에 그러한 흡인력이 정점에 도달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인구감소의 시점이 두 계열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산통계연보』에서는 199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는데, 1991년에 일시 다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다 1995년 광역시가 되면서 최대치로 늘어났다가 1996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로 접어든다. 추계 인구는 1995년까지 인구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1996년에 들어와 비로소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에는 두 차례의 시역확대가 있었다.²⁰⁾ 시역의 확대는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1989년과 1995년에는 인구증가의 외적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초 부산인구의 동향에서 중요한 것은 순전출입(전입-전출) 인구 즉 사회적 증감인구가 자연적 증가 인구를 능가했는가에 있다. 추계인구는 그렇지 않다고 시사하는 반면 『부산통계연보』인구는 사회적증감 인구가 자연증감보다 커서 감소추세를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시사하고 있다.

넷째,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추계인구> 『부산통계연보』 인구이고,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추계인구<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관계를 보였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 즉 부산경제가 활력이 있어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시기에는 추계인구가 더 많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부산에 더 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다 부산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추계인구가 더 적어졌는데, 이것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20) 1989. 1. 1일 제5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창원군 천가면이 부산에 편입되어 면적은 526.00km²로 늘어났고 강서구가 설치(12자치구)되었다. 그리고 1995. 1. 1일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이 되면서 기장군이 설치(15구, 1군)되고 면적은 748.92km²로 늘어났다.

2.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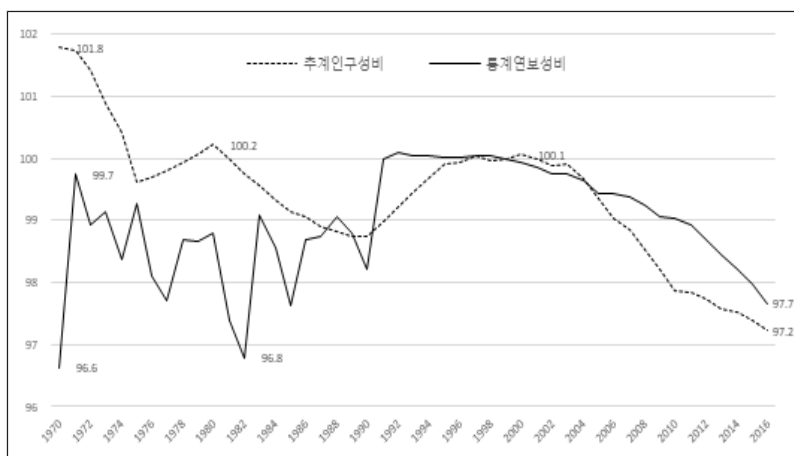
이제까지 부산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초도시²¹⁾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성비를 추계인구를 통해 보면 여초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성비를 그린 <그림 6>을 보자. 우선 평균 성비는 추계인구의 경우 99.4로 100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비 100은 남녀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약간 많았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경우 99.0으로 나타나 추계인구 쪽보다 성비가 낮다.

『부산통계연보』 성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았다.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경우 1990년대에만 100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성비는 100미만이였다. 즉 『부산통계연보』에서 성비는 1980년대까지 계속 100이하에 있다가 1991년에 100을 회복한다. 1991년은 신발기업 도산의 회오리가 있었던 시기이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 다시 성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성비는 98.9로 떨어졌다. 『부산통계연보』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성비는 많이 낮게 나타나는데, 1970년 이래 계속 낮아지다가 1982년에 최저를 기록한 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추계인구 기준으로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1970년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연도가 더 많았으며, 2000년까지도 남자와 여자의 숫자는 거의 같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후

21) 부산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여자가 남자보다 대부분의 시기에 더 많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신발과 섬유산업에서 주 노동력은 여성이었다. 박영구, 『부산의 제조업-통계와 발전- 현대 부산의 제조업 1945~2000』, 부산발전연구원, 2005, 309쪽.

반부터이며 특히 2010년부터 성비가 98이하로 낮아졌다. 통계청 추계 인구 기준으로 성비를 보면 1970년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성비가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지만, 1970년 경 부산은 남초도시였다. 여초도시가 되는 것은 1975년부터이다. 1989년 98.7로 최저를 기록한 후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다시 하락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1997-2001년 사이에 100으로 균형을 이루고 이후 성비는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 여초도시로의 빠른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 중반부터는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성비보다 더 낮다.



<그림 6> 추계인구와 통계연보 인구의 성비(%)

두 계열 인구의 성비를 볼 때 1988년이 전환점을 이룬다. 크게 보아 추계인구>『부산통계연보』 인구인 때에는 추계인구 기준으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많거나 같았고, 추계인구<『부산통계연보』 인구 일 때에는 추계인구 기준으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적었다. 이것을 성비로 보면 1988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인 기간

(1970~1987)에는 추계인구 성비>주민등록인구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민등록인구가 실제인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부산통계연보』의 성비가 추계인구의 성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인 기간(1988년 이후)에는 추계인구 성비<주민등록인구 성비로 나타나 주민등록인구가 실제인구를 과대 반영하는 상황에서는 추계인구 성비보다 『부산통계연보』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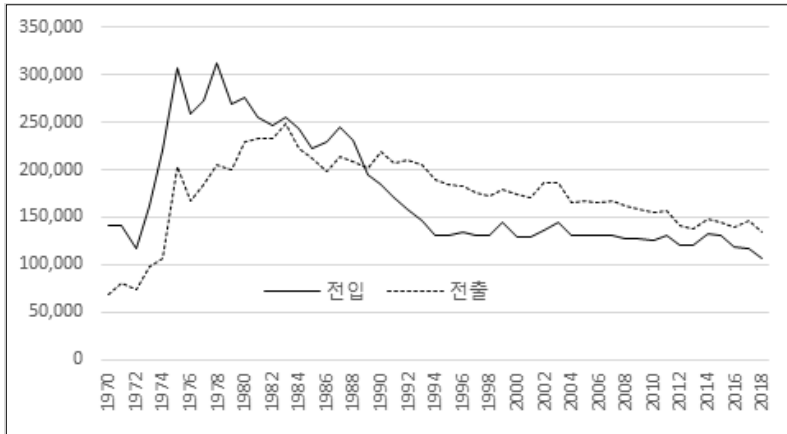
한편 1995~2005년의 약 10년간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계열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은 100에 매우 근접해 있다. 성비가 100에 매우 근접한 이 시기에는 추계인구의 성비와 주민등록인구의 성비가 일치하였다.

3. 전출입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추이는 부산과 다른 광역시도와의 전출입²²⁾ 인구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림 7>에서 보듯이 부산인구의 역외전입과 전출 추이에서는 1989년이 대전환기였다. 1988년까지는 전입>전출이었던 것이 1989년부터는 전출>전입으로 바뀌고 있다. 크게 보아 전입>전출이었던 시기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였고, 전입<전출이었던 시기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의 관계를 보였다.

전입인구>전출인구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았던 시기로서 이때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였다. 반면 전출>전입은 부산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부산에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경우인데 이 때는 주민등록인구>추계인구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였다.

22) 김대래,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와 그 함의(1970~2018)」, 『지방정부연구』 23-1, 1~24쪽 참조.



<그림 7> 부산의 역외 전출입 인구 추이(명)

이러한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3>은 각 기간별 부산의 역외전출입 인구를 광역시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1970년대 순전입인구의 규모이다. 1974년 순전입인구는 113,437명에 이르렀고, 1975년과 1978년에도 10만명이 넘는 순전입이 있었다. 그러다 1989년부터 전출초과 흐름이 나타났다. 전출초과 인구는 1993년에 58,925명에 이르렀는데, 1990년대는 줄곧 4-5만명대의 순전출을 기록하였다. 그러다 2000년대에는 3-4만명대 그리고 2010년대에는 2-3만명대의 순전출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출입은 크게 보아 수도권으로는 끊임없는 전출초과가 있었던 반면 농촌지역을 가진 광역시도로부터는 전입초과가 있었다.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등 농촌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도에서는 1970년대에 부산으로 폭발적인 전입인구를 발생시켰고, 1980년대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가 1990년대부터는 오히려 부산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흐름이다.²³⁾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의 전출입에서는 각 기간 모

<표 3> 기간별 각 시도와의 순전출입 총괄(명)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8	전체
전국	815,437	197,438	-460,672	-381,941	-196,850	-26,588
서울	-151,181	-156,531	-90,838	-98,223	-40,190	-536,963
인천	0	-6,925	-12,800	-8,557	-3,773	-32,055
경기	-5,990	-27,613	-54,033	-69,703	-24,928	-182,267
대구	0	622	-8,961	567	2,680	-5,092
경북	205,669	90,140	-9,331	-9,596	-5,581	271,301
광주	0	-21	-6,959	-758	315	-7,423
전북	71,619	23,811	-1,534	-529	-809	92,558
전남	109,903	73,980	889	-832	-2,030	181,910
제주	11,048	4,641	-5,121	-2,542	-5,388	2,638
대전	0	-869	-12,095	-6,189	-2,777	-21,930
세종	0	0	0	0	-2,529	-2,529
충북	34,031	12,144	-4,850	-3,723	-2,782	34,820
충남	38,306	9,943	-7,492	-10,760	-7,810	22,187
강원	30,759	18,671	618	-1,966	-578	47,504
경남	471,273	155,445	-239,004	-144,328	-94,833	148,553
울산	0	0	-9,161	-24,802	-5,837	-39,800

자료: KOSIS 각 연도에서 작성

주: 국내이동통계자료

두 전출초과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1970년대의 전출초과가 컸다. 부산으로 많은 광역시도의 인구가 몰려들던 시기에 수도권 특히 서울로는 매우 많은 유출이 있었다. 많은 유입인구로 인한 엄청난 인구증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1970년대 부산인구의 서울 유출은 대단한 규모였다.²⁴⁾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23) 농촌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타 도와는 다른 유출입을 보인 것이 경남이다. 경남과는 최대의 유출입을 보였는데, 최근의 전출초과는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에 따른 광역화를 반영하고 있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에 대해서는 김대래, 『부산권 기업의 역외이전과 경제의 광역화』, 『부산 글로벌 경제론』, 부산발전연구원, 2016, 176~207쪽 참조

24) 이 시기 부산인구의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일방적 유출은 서울의 팽창으로 인한 인구

나타나기 시작한 부산의 인적자본 애로의 원인이 되었다.²⁵⁾ 경기도와
의 유출입에서는 부산경제가 침체로 접어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순전출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과밀화로 인한 분산정책 그
리고 IT산업의 발전과 수도권집중 현상의 심화로 경기도에 기업이 밀집
되면서 부산에 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로 대거 밀려났음을
시사한다.

IV. 두 계열 인구 차이의 연령대별 검토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연령대별 구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비교를 위해 5년
단위로 5개 년도를 뽑아 <표 4>에 정리를 하였다. 1975년에는 두 계열
인구사이에 175,018명의 차이가 있었는데 추계인구가 더 많았다. 이 가
운데 0~4세 사이의 인구가 39,296명으로 22.5%를 점하였다. 즉 추계인
구와 주민등록인구와의 차이 가운데 5명 중 1명은 0~4세의 유아였다.
그 다음은 15~19세 사이가 17.7%였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40.2%에 이
른다. 1985년에도 약간 비중은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 흐름은 동일하
였다. 전체 115,877명의 차이 가운데 18.5%인 21,465명이 0~4세 사이
에서 나왔고, 그 다음은 15~19세 사이로 14.2%였다. 그리고 두 연도 모
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차이가 줄어들었다. 나이가 있는 연령대의 사람
들은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은 시기의 인구차이는 주로 어린 연령

이동의 결과였다. 부산기업의 서울로의 이전과 같은 직접적인 이전요인에 의한 것이
라기 보다는 서울의 팽창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서울로의 이동은 인적자본의 유출이라는 문제가 수반되었다.

25) 박영구, 앞의 책, 2005, 189쪽.

대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비율이 20% 전후를 차지하였다.

0~4세를 비롯하여 5~9세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과 출생등록의 지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인 부산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그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향후 상급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아이들을 부산으로 옮기는 일이 많았다. 그런 한편 이 시기까지도 조금 남아있던 관행으로 출생신고를 늦추는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국의 인구통계에서도 확인이 된다. ‘주민등록인구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출생과 동시에 생성하고 사망과 동시에 필히 소멸시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주민등록인구에서 0~6세의 인구는 연령상승에 따라 6세 혹은 7세가 되면 최대 인구수가 된다는 것이다. 없었던 인구가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이것은 법적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찾아진다. 6~7세에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초등학교 입학 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²⁶⁾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아직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은 채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많은 연령대는 15~19세였다. 이 시기 15~19세는 이미 노동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오던 시기였다. 15~29세까지가 대체로 두 계열 인구 차이의 30% 전후를 점한 것은 그러한 전입인구 흐름의 연장이라고 보여진다. 젊은이들의 경우 일단 도시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고 안정 되고 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이 흔히 있던 시기였다.

26) 김종태, 「주민등록 0~6세 인구의 역추정과 기존 인구통계와의 출생아수 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6, 2009, 1146쪽

<표 4> 부산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의 연령대별 구성 추이(명, %)

전체	1975		1985		1995		2005		2015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계	175,018	100	115,877	100	-31,585	100	-48,002	100	-61,517	100
0 - 4세	39,296	22.5	21,465	18.5	1,196	-3.8	6,719	-14.0	-251	0.4
5 - 9세	16,895	9.7	12,688	10.9	3,255	-10.3	269	-0.6	-5,576	9.1
10 - 14세	19,228	11.0	9,327	8.0	9,921	-31.4	-4,297	9.0	2,996	-4.9
15 - 19세	30,903	17.7	16,430	14.2	-732	2.3	271	-0.6	6,850	-11.1
20 - 24세	8,865	5.1	11,276	9.7	8,396	-26.6	2,904	-6.0	2,291	-3.7
25 - 29세	12,778	7.3	10,787	9.3	-15,637	49.5	-13,026	27.1	1,612	-2.6
30 - 34세	10,570	6.0	3,842	3.3	-9,949	31.5	-3,804	7.9	3,147	-5.1
35 - 39세	9,757	5.6	2,011	1.7	-13,218	41.8	-13,954	29.1	-9,522	15.5
40 - 44세	8,038	4.6	10,974	9.5	-10,502	33.2	-3,908	8.1	-3,937	6.4
45 - 49세	5,191	3.0	6,477	5.6	220	-0.7	-9,154	19.1	-10,998	17.9
50 - 54세	4,812	2.7	2,692	2.3	-2,839	9.0	-8,876	18.5	-823	1.3
55 - 59세	2,194	1.3	2,006	1.7	873	-2.8	451	-0.9	-12,532	20.4
60 - 64세	1,310	0.7	2,490	2.1	992	-3.1	183	-0.4	-14,865	24.2
65 - 69세	1,821	1.0	933	0.8	-775	2.5	-100	0.2	-9,012	14.6
70 - 74세	1,766	1.0	1,399	1.2	147	-0.5	-66	0.1	-89	0.1
75 - 79세	889	0.5	487	0.4	-1,092	3.5	-843	1.8	-3,577	5.8
80세이상	705	0.4	593	0.5	-1,841	5.8	-771	1.6	-7,231	11.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 1. 추계인구는 중위추계 기준 2. 1990년까지는 상주인구 기준, 1991년부터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그러다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어지는 시기에는 두 계열 인구 차이가 발생하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5년 두 계열인구 차이는 -31,58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25~29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의 사람들이다. 2005년에는 -48,002명의 차이가 있었는데 29.1%가 35~39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10년 전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역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할 연령대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부산의 주력산업이

무너지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영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다 2015년에는 - 61,517명의 차이로 확대되었는데, 24.2%가 60-64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즉 10년 사이에 두 계열 인구 차이의 주된 계층이 30대에서 60대로 이동하고 있다. 물론 그 중간 연도에서 40대와 50대를 빠르게 지나왔을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여전히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세대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것에 비해 60대는 부산에 주소를 두면서 타지역에서 소득기회를 찾는 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산이 젊은 층은 물론 모든 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의 연령대별 추이를 남녀별로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만든 것이 <표 5>이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 인구계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연령대가 올라가는 것은 남녀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각 연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1975년 남자의 경우 0~4세가 24.6%로 가장 높는데 여자는 30~34세에서 20.3%로 0~4세의 20.2%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모두 유아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여자의 경우 30대 초반에서 주민등록인구보다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연령대의 경우 유년기의 자녀를 동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일 자리를 찾아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부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일 것이다.

1985년에는 1975년과 마찬가지로 0~4세에서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서 그 비중이 높다. 그리고 여성의 경

27) 일례로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부산의 실업률은 매우 높았는데,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는 2003년까지 부산인구의 역외이동이 30%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 권기철,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24-3, 2006, 97~123쪽 참조.

우 남성과는 달리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는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은 시기에 해당하는데, 1995년의 경우 남자는 35~39세의 비중이 47.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25~29세 사이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다. 남자는 30대 후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주민등록을 부산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 때문에 실제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5년에는 남자는 25~29세에서 28.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35~39세에서 30.9%로 두 계열 사이의 인구차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별 연령대가 1995년과 반대로 여성쪽의 연령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는 20대 후반, 여자는 30대 전반의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부산에 두고 있는 것은 같은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2015년에는 남자는 55-59세 그리고 여자는 60-64세에서 주민등록인구보다 추계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는 50대 후반, 여자는 60대 전반²⁸⁾에서 두 인구계열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비중이 좀 더 높다. 일자리때문이든 가족관계때문 이든 높은 연령대에서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인구계열 차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한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특히 여성의 연령대가 더 높고 또 비중도 높은 것이 주목된다.

28) 이 연령대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나이대이다.

<표 5> 부산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의 성별·연령대별
구성 추이(명, %)

	1975		1985		1995		2005		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 4세	24.6	20.2	15.3	23.6	-8.2	1.0	-15.9	-12.2	1.0	-0.2
5 - 9세	10.1	9.2	8.6	14.7	-7.8	-13.1	-2.1	0.8	8.4	9.8
10 - 14세	11.1	10.8	6.3	10.8	-33.9	-28.7	8.6	9.3	-5.4	-4.3
15 - 19세	19.0	16.3	11.1	19.2	11.7	-7.9	-1.4	0.2	-8.4	-14.2
20 - 24세	3.8	6.4	5.8	15.9	-16.2	-37.9	-11.9	-0.6	-5.7	-1.5
25 - 29세	7.7	6.9	14.6	0.9	44.5	55.0	28.4	25.9	-4.9	-0.1
30 - 34세	5.6	20.3	10.1	-7.5	33.4	29.5	5.0	10.7	-8.1	-1.8
35 - 39세	5.8	5.4	2.3	0.8	47.8	35.4	27.1	30.9	13.0	18.2
40 - 44세	3.9	5.3	10.4	7.9	37.2	28.9	14.7	2.0	7.0	5.7
45 - 49세	2.7	-11.7	6.3	4.5	6.7	-8.7	27.6	11.1	22.4	13.0
50 - 54세	2.6	2.9	2.6	1.8	3.8	14.6	22.8	14.5	5.6	-3.4
55 - 59세	0.9	1.6	2.0	1.2	-9.5	4.6	1.5	-3.2	23.4	17.1
60 - 64세	0.7	0.8	2.1	2.3	-7.2	1.2	-0.5	-0.3	22.7	25.8
65 - 69세	0.7	1.3	0.7	1.0	-3.5	8.9	-2.2	2.5	13.6	15.8
70 - 74세	0.5	1.6	1.1	1.4	-2.7	2.0	-0.7	0.9	1.1	-0.9
75 - 79세	0.3	0.7	0.3	0.6	1.3	5.8	-1.3	4.6	5.7	5.9
80세이상	0.1	0.7	0.3	0.8	2.6	9.4	0.3	2.9	8.5	15.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 1. 추계인구는 중위추계 기준 2. 1990년까지는 상주인구 기준, 1991년부터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어떤 연령대이든 주민등록인구가 추계인구보다 많다는 것은 주민등록은 부산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추계인구가 더 적어지는 시기의 두 계열 인구 차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령대의 이동은 있지만 생산가능인구에서 가장 높은 인구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의 경우 그것은 20대 후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2005년에는 30대 그리고 2015년에는 60대로

이동하고 있다. 2015년의 60대로의 이동은 일자리의 전반적인 부족과 함께 부산인구의 빠른 고령화도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V. 결론

1. 요약과 시사

1) 요약

한국의 공식인구통계는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 그리고 인구센서스가 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추계인구이며 인구센서스는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가와 달리 지역차원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의 결과 사이에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전에 주목하여 부산의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계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추이에서 전환점은 1989년이였다. 그 이전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였고, 이후에는 주민등록인구>추계인구였다. 즉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부산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였고,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두 계열인구의 증감을 보면 추계인구의 증감은 주민등록인구의 증감보다 완만하였다. 또한 추계인구 기준으로는 1970년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증가폭이 커지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는 증감인구가 큰 폭의 진폭을 보였다. 인구감소의 시점에서도 두 계열은 차이가 있었다. 주민등록인구는 1990년부터 감소가 시작되는데 반해, 추계인구는 1995년까지 인구규모가 줄

어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추이는 부산과 다른 광역시도와의 전출입 인구 동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전출입 인구의 추이에서도 1989년이 전환기였는데, 1988년까지는 전입>전출이었던 것이 1989년부터는 전출>전입으로 바뀌고 있다. 전입/전출을 두 계열의 인구 추이와 연결지어 보면 전입>전출이었던 시기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였고, 전입<전출이었던 시기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이제까지 부산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초도시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추계인구 기준으로는 1970년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연도가 더 많았으며, 2000년까지도 남자와 여자의 숫자는 거의 같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후반부터이며 특히 2010년부터 성비가 98이하로 낮아졌다. 두 계열 인구의 성비를 볼 때 1988년이 전환점을 이루는데, 크게 보아 추계인구>『부산통계연보』 인구인 때에는 추계인구 기준으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많거나 같았고, 추계인구<『부산통계연보』 인구 일 때는 추계인구 기준으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적었다. 이것을 성비로 보면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인 기간(1970~1987)에는 추계인구 성비>주민등록인구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민등록인구가 실제인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부산통계연보』의 성비가 추계인구의 성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인 기간(1988년 이후)에는 추계인구 성비<주민등록인구 성비로 나타나 주민등록인구가 실제인구를 과대반영하는 상황에서는 추계인구 성비보다 『부산통계연보』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는 모든 기간 동안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89년을 전환기로 그 이전에는 추계인구가 더 많았고 이

후에는 주민등록인구가 더 많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대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1975년에는 0~4세 사이의 인구가 39,296명으로 22.5%를 점하였다. 즉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와의 차이 가운데 5명 중 1명은 0~4세의 유아였다. 그 다음은 15~19세 사이가 17.7%였다. 1985년에도 약간 비중은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 흐름은 동일하였다.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은 시기의 인구차이는 주로 어린 연령대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비율이 20% 전후를 차지하였다.

그러다 추계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어지는 시기에는 두 계열 인구 차이가 발생하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5년 두 계열 인구 차이는 -31,58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25~29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의 사람들이 차이의 주된 연령대였다. 2005년에는 -48,002명의 차이가 있었는데 29.1%가 35-39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다 2015년에는 -61,517명의 차이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24.2%가 60-64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즉 10년 사이에 차이 인구의 주된 계층이 30대에서 60대로 이동하였는데 그 중간 연도에서 40대와 50대를 빠르게 지나왔을 것이다.

다섯째, 두 개의 인구 계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인구의 연령대를 성별로 보면 1975년에 남자는 0~4세가 24.6%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30-34세에서 20.3%로 0-4세의 20.2%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1985년에는 1975년과 마찬가지로 0~4세에서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1995년의 경우 남자는 35~39세의 비중이 47.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25~29세 사이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

다. 한편 2005년에는 남자는 25~29세에서 28.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35~39세에서 30.9%로 두 계열 사이의 인구차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다 2015년에는 남자는 55~59세 그리고 여자는 60~64세에서 주민등록인구보다 추계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시사

첫째, 1988년과 1989년 즉 1980년대 후반은 부산의 경제와 사회에서 하나의 전환기였다. 두 계열 인구의 크기가 역전된 것은 1989년이었으며, 전출입인구 추이의 전환도 1989년에 일어났다. 그리고 두 계열 인구에서 성비의 역전은 1988년에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는 1987년 6.29와 7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급격한 임금상승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큰 타격이 되었고 부산의 주력 산업이었던 신발을 중심으로 도산이 속출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까지 이어진 노동집약적 기업의 도산은 부산경제의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도시였던 부산경제는 1980년대 후반을 통해 큰 전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것은 인구추이에도 반영되고 있었다.²⁹⁾

둘째, 1989년을 전기로 이전에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이고 이후는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의 인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실제로 부산에 살고 있는 인구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1989년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았고, 1989년 이후에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

29) 부산의 제조업에 관한 각종 지표를 연구한 것에 따르면 종사자수와 주요생산비는 1987년, 생산액과 급여액 그리고 부가가치액은 1990년이 정점이었다. 김대래, 『부산의 산업과 경제』, 누리출판사, 2017, 57쪽.

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지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 간의 차이는 결국 부산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었다.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의 시기에는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였고, 반대로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의 시기에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추계인구에서 나타나는 성비의 추이는 부산은 항상 여초도시였다는 정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1970년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연도가 더 많았으며, 2000년까지도 남자와 여자의 숫자는 거의 같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후반부터이며 특히 2010년부터 성비가 98이하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시기에 상당한 여초도시였다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두 계열 인구차이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989년 이전에는 0~4세와 5~9세 사이였는데, 이것은 교육기회를 찾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부산으로 들어온 인구가 많았던 것과 함께 당시까지의 관행이었던 출생등록의 지체가 적지 않았던 것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많은 연령대는 15~19세였는데,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들어온 세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젊은이들의 경우 일단 도시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고 안정되고 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이 흔히 있던 시기였다. 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20대와 30대에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부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의 주력산업이 무너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의 젊은이들이 역외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 2015년에는 60대가 두 계열 인구차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여 젊은 층은 물론 장년계층까지 일자리를 부산 밖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⁰⁾

다섯째,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도 남녀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두 계열 인구차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 시기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지배하였던 시기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부산으로 왔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반대로 추계인구<주민등록인구 시기에는 전반적인 연령대의 상승 속에서도 2000년 이후에는 여자쪽이 남자보다 연령대가 더 높았다.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지 않는 연령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도 여자의 연령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여자 쪽이 남자에 비해 부산을 떠나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이 주목된다.

2. 의의와 과제

본 논문의 의의와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부산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산경제에서의 큰 전환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이것은 부산

30) 어떤 연령대이든 주민등록인구가 추계인구보다 많다는 것은 주민등록은 부산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추계인구가 더 적어지는 시기의 두 계열 인구 차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에서 가장 높은 인구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의 경우 그것은 20대 후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2005년에는 30대 그리고 2015년에는 60대로 이동하고 있다. 2015년의 60대로의 이동은 일자리의 전반적인 부족과 함께 부산인구의 빠른 고령화도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제를 이해하고 또 실천적 해법을 찾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1980년대 후반을 전기로 앞뒤로 구분되는 부산경제의 전환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실천적인 도시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중요한 것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1970년대와 1980년대 부산시의 도시정책은 도시문제를 앞서 준비하고 선도한다기 보다 주어지는 문제를 처리하기에 급급하였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던 자료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주택 그리고 수도 등에서의 문제는 기대이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제는 역으로 부산이 생각하고 있는 인구보다 적은 인구가 실제로 부산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주택과 도로 등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화의 확산은 주택 등의 정책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인구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면 그런 만큼 몇 가지 과제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고 좀 더 발전시키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의 엄밀성과 해석의 명료함에 대한 검토도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선행 또는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인구의 이동은 경제적인 요인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화, 교육, 의료는 물론 기후 그리고 가족간의 결합 형태 등 아주 미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다양한 요인들을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미시적인 연구성과들을 좀 더 정리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권기철, 『부산광역권의 제조업 고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 및 인구이동의 균형화 효과』, 『경제연구』 24-3, 2006.
- 김근영 · 김순관 · 이신해, 『Comparing Census Data with Resident Registration Data With Respect to Population and Household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수도권지역 인구조와 가구에 대한 인구주택센서스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의 비교연구』, 『국토계획』 38-1, 2003.
- 김대래, 『부산인구의 시외 전출입과 그 함축성(1970~2012)』, 『2015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 _____, 『부산권 기업의 역외 이전과 경제의 광역화』, 『부산글로벌 경제론』, 부산발전연구원, 2016.
- _____, 『부산의 산업과 경제』, 누리, 2017.
- _____,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와 그 함의(1970~2018)』, 『지방정부연구』 23-1, 2019.
- 김종태, 『주민등록 0세~6세 인구의 역 추정과 기존 인구통계와의 출생아수 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6, 2009.
- _____, 『공식인구통계들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8-1, 2017.
- 동남지방통계청, 『(각년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
- 박영구, 『현대 부산의 제조업-1945~2000 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2005.
- 주수현 외, 『부산 글로벌 경제론』, 부산발전연구원, 2016.
- 최은영 · 구동희 · 조순기,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2010.
- 최은영 · 구동희, 『부산의 인구 변동 요인과 인구 구조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6-3, 2012.

2. 기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index/index.do>)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statdb0101>)

투고일 : 2019. 06. 07. 심사완료일 : 2019. 07. 05. 게재확정일 : 2019. 07. 25.

www.kci.go.kr

<부표 1> 통계청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추이(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성비	
	통계청 추계인구	『부산통계 연보』인구	통계청 추계인구	『부산통계 연보』인구	통계청 추계인구	『부산통계 연보』인구	통계청 추계인구	『부산통계 연보』인구
1970	2,045,828	1,842,259	1,032,010	905,351	1,013,818	936,908	101.8	96.6
1971	2,155,433	1,943,958	1,087,057	970,711	1,068,376	973,247	101.7	99.7
1972	2,270,494	2,015,162	1,143,248	1,002,086	1,127,246	1,013,076	101.4	98.9
1973	2,386,209	2,071,950	1,198,433	1,031,502	1,187,776	1,040,448	100.9	99.1
1974	2,504,899	2,306,041	1,254,982	1,143,575	1,249,917	1,162,466	100.4	98.4
1975	2,625,143	2,453,173	1,310,001	1,222,153	1,315,142	1,231,020	99.6	99.3
1976	2,756,845	2,573,713	1,376,272	1,274,588	1,380,573	1,299,125	99.7	98.1
1977	2,890,337	2,697,947	1,443,836	1,333,391	1,446,501	1,364,556	99.8	97.7
1978	3,026,409	2,879,570	1,512,747	1,430,287	1,513,662	1,449,283	99.9	98.7
1979	3,165,516	3,034,596	1,583,340	1,506,996	1,582,176	1,527,600	100.1	98.7
1980	3,309,338	3,159,766	1,656,543	1,570,367	1,652,795	1,589,399	100.2	98.8
1981	3,399,677	3,249,643	1,699,668	1,603,248	1,700,009	1,646,395	100.0	97.4
1982	3,469,299	3,343,783	1,732,535	1,644,583	1,736,764	1,699,200	99.8	96.8
1983	3,526,625	3,395,171	1,759,359	1,689,784	1,767,266	1,705,387	99.6	99.1
1984	3,580,187	3,495,289	1,784,119	1,734,894	1,796,068	1,760,395	99.3	98.6
1985	3,627,990	3,514,798	1,806,061	1,736,376	1,821,929	1,778,422	99.1	97.6
1986	3,671,462	3,578,844	1,826,958	1,777,660	1,844,504	1,801,184	99.0	98.7
1987	3,724,562	3,654,097	1,851,982	1,815,431	1,872,580	1,838,666	98.9	98.7
1988	3,773,138	3,750,626	1,875,287	1,866,413	1,897,851	1,884,213	98.8	99.1
1989	3,803,288	3,857,312	1,889,544	1,916,907	1,913,744	1,940,405	98.7	98.8
1990	3,803,334	3,798,113	1,889,516	1,881,926	1,913,818	1,916,187	98.7	98.2
1991	3,816,713	3,892,820	1,898,481	1,946,204	1,918,232	1,946,616	99.0	100.0
1992	3,829,348	3,887,278	1,907,117	1,944,544	1,922,231	1,942,734	99.2	100.1
1993	3,839,022	3,868,429	1,914,301	1,934,599	1,924,721	1,933,830	99.5	100.0
1994	3,846,467	3,846,544	1,920,239	1,923,770	1,926,228	1,922,774	99.7	100.1
1995	3,852,295	3,892,972	1,925,224	1,946,702	1,927,071	1,946,270	99.9	100.0
1996	3,826,168	3,878,918	1,912,428	1,939,725	1,913,740	1,939,193	99.9	100.0
1997	3,803,326	3,865,114	1,902,137	1,933,045	1,901,189	1,932,069	100.0	100.1
1998	3,775,121	3,842,834	1,887,110	1,921,872	1,888,011	1,920,962	100.0	100.0
1999	3,752,322	3,831,454	1,876,039	1,915,491	1,876,283	1,915,963	100.0	100.0
2000	3,732,630	3,812,392	1,866,962	1,905,565	1,865,668	1,906,827	100.1	99.9
2001	3,716,425	3,786,033	1,858,228	1,891,585	1,858,197	1,894,448	100.0	99.8

2002	3,684,942	3,747,369	1,841,471	1,871,335	1,843,471	1,876,034	99.9	99.7
2003	3,648,852	3,711,268	1,823,508	1,853,194	1,825,344	1,858,074	99.9	99.7
2004	3,623,903	3,684,153	1,809,016	1,838,789	1,814,887	1,845,364	99.7	99.6
2005	3,590,291	3,657,840	1,789,393	1,823,636	1,800,898	1,834,204	99.4	99.4
2006	3,563,009	3,635,389	1,772,957	1,812,627	1,790,052	1,822,762	99.0	99.4
2007	3,538,031	3,615,101	1,758,736	1,801,832	1,779,295	1,813,269	98.8	99.4
2008	3,514,331	3,596,063	1,744,222	1,791,273	1,770,109	1,804,790	98.5	99.3
2009	3,497,197	3,574,340	1,732,711	1,778,834	1,764,486	1,795,506	98.2	99.1
2010	3,476,658	3,600,381	1,719,564	1,791,455	1,757,094	1,808,926	97.9	99.0
2011	3,476,349	3,586,079	1,719,138	1,783,378	1,757,211	1,802,701	97.8	98.9
2012	3,461,881	3,573,533	1,711,058	1,774,993	1,750,823	1,798,540	97.7	98.7
2013	3,455,734	3,563,578	1,706,570	1,767,963	1,749,164	1,795,615	97.6	98.5
2014	3,452,309	3,557,716	1,704,522	1,762,869	1,747,787	1,794,847	97.5	98.2
2015	3,452,260	3,559,780	1,703,339	1,761,594	1,748,921	1,798,186	97.4	98.0
2016	3,447,109	3,546,887	1,699,294	1,752,465	1,747,815	1,794,422	97.2	97.7

자료: 통계청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 1. 2019년 2월 5일 다운로드 2. 2015년까지는 확정인구 3. 이하<부표>에 동일함

<부표 2> 통계청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차이 및 증감인구(명)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추계-연보	추계-연보	추계-연보	추계증감	연보증감	추계증감	연보증감
1970	203,569	126,659	76,910				
1971	211,475	116,346	95,129	109,605	101,699	55,047	65,360
1972	255,332	141,162	114,170	115,061	71,204	56,191	31,375
1973	314,259	166,931	147,328	115,715	56,788	55,185	29,416
1974	198,858	111,407	87,451	118,690	234,091	56,549	112,073
1975	171,970	87,848	84,122	120,244	147,132	55,019	78,578
1976	183,132	101,684	81,448	131,702	120,540	66,271	52,435
1977	192,390	110,445	81,945	133,492	124,234	67,564	58,803
1978	146,839	82,460	64,379	136,072	181,623	68,911	96,896
1979	130,920	76,344	54,576	139,107	155,026	70,593	76,709
1980	149,572	86,176	63,396	143,822	125,170	73,203	63,371
1981	150,034	96,420	53,614	90,339	89,877	43,125	32,881
1982	125,516	87,952	37,564	69,622	94,140	32,867	41,335
1983	131,454	69,575	61,879	57,326	51,388	26,824	45,201

1984	84,898	49,225	35,673	53,562	100,118	24,760	45,110
1985	113,192	69,685	43,507	47,803	19,509	21,942	1,482
1986	92,618	49,298	43,320	43,472	64,046	20,897	41,284
1987	70,465	36,551	33,914	53,100	75,253	25,024	37,771
1988	22,512	8,874	13,638	48,576	96,529	23,305	50,982
1989	-54,024	-27,363	-26,661	30,150	106,686	14,257	50,494
1990	5,221	7,590	-2,369	46	-59,199	-28	-34,981
1991	-76,107	-47,723	-28,384	13,379	94,707	8,965	64,278
1992	-57,930	-37,427	-20,503	12,635	-5,542	8,636	-1,660
1993	-29,407	-20,298	-9,109	9,674	-18,849	7,184	-9,945
1994	-77	-3,531	3,454	7,445	-21,885	5,938	-10,829
1995	-40,677	-21,478	-19,199	5,828	46,428	4,985	22,932
1996	-52,750	-27,297	-25,453	-26,127	-14,054	-12,796	-6,977
1997	-61,788	-30,908	-30,880	-22,842	-13,804	-10,291	-6,680
1998	-67,713	-34,762	-32,951	-28,205	-22,280	-15,027	-11,173
1999	-79,132	-39,452	-39,680	-22,799	-11,380	-11,071	-6,381
2000	-79,762	-38,603	-41,159	-19,692	-19,062	-9,077	-9,926
2001	-69,608	-33,357	-36,251	-16,205	-26,359	-8,734	-13,980
2002	-62,427	-29,864	-32,563	-31,483	-38,664	-16,757	-20,250
2003	-62,416	-29,686	-32,730	-36,090	-36,101	-17,963	-18,141
2004	-60,250	-29,773	-30,477	-24,949	-27,115	-14,492	-14,405
2005	-67,549	-34,243	-33,306	-33,612	-26,313	-19,623	-15,153
2006	-72,380	-39,670	-32,710	-27,282	-22,451	-16,436	-11,009
2007	-77,070	-43,096	-33,974	-24,978	-20,288	-14,221	-10,795
2008	-81,732	-47,051	-34,681	-23,700	-19,038	-14,514	-10,559
2009	-77,143	-46,123	-31,020	-17,134	-21,723	-11,511	-12,439
2010	-123,723	-71,891	-51,832	-20,539	26,041	-13,147	12,621
2011	-109,730	-64,240	-45,490	-309	-14,302	-426	-8,077
2012	-111,652	-63,935	-47,717	-14,468	-12,546	-8,080	-8,385
2013	-107,844	-61,393	-46,451	-6,147	-9,955	-4,488	-7,030
2014	-105,407	-58,347	-47,060	-3,425	-5,862	-2,048	-5,094
2015	-107,520	-58,255	-49,265	-49	2,064	-1,183	-1,275
2016	-99,778	-53,171	-46,607	-5,151	-12,893	-4,045	-9,129

<부표 3> 통계청 추계인구와 『부산통계연보』 인구의 증감율(%)

구분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추계증감	연보증감	추계증감률	연보증감률	추계증감률	연보증감률	추계증감률	연보증감률
1971	54,558	36,339	5.4	5.5	5.3	7.2	5.4	3.9
1972	58,870	39,829	5.3	3.7	5.2	3.2	5.5	4.1
1973	60,530	27,372	5.1	2.8	4.8	2.9	5.4	2.7
1974	62,141	122,018	5.0	11.3	4.7	10.9	5.2	11.7
1975	65,225	68,554	4.8	6.4	4.4	6.9	5.2	5.9
1976	65,431	68,105	5.0	4.9	5.1	4.3	5.0	5.5
1977	65,928	65,431	4.8	4.8	4.9	4.6	4.8	5.0
1978	67,161	84,727	4.7	6.7	4.8	7.3	4.6	6.2
1979	68,514	78,317	4.6	5.4	4.7	5.4	4.5	5.4
1980	70,619	61,799	4.5	4.1	4.6	4.2	4.5	4.0
1981	47,214	56,996	2.7	2.8	2.6	2.1	2.9	3.6
1982	36,755	52,805	2.0	2.9	1.9	2.6	2.2	3.2
1983	30,502	6,187	1.7	1.5	1.5	2.7	1.8	0.4
1984	28,802	55,008	1.5	2.9	1.4	2.7	1.6	3.2
1985	25,861	18,027	1.3	0.6	1.2	0.1	1.4	1.0
1986	22,575	22,762	1.2	1.8	1.2	2.4	1.2	1.3
1987	28,076	37,482	1.4	2.1	1.4	2.1	1.5	2.1
1988	25,271	45,547	1.3	2.6	1.3	2.8	1.3	2.5
1989	15,893	56,192	0.8	2.8	0.8	2.7	0.8	3.0
1990	74	-24,218	0.0	-1.5	0.0	-1.8	0.0	-1.2
1991	4,414	30,429	0.4	2.5	0.5	3.4	0.2	1.6
1992	3,999	-3,882	0.3	-0.1	0.5	-0.1	0.2	-0.2
1993	2,490	-8,904	0.3	-0.5	0.4	-0.5	0.1	-0.5
1994	1,507	-11,056	0.2	-0.6	0.3	-0.6	0.1	-0.6
1995	843	23,496	0.2	1.2	0.3	1.2	0.0	1.2
1996	-13,331	-7,077	-0.7	-0.4	-0.7	-0.4	-0.7	-0.4
1997	-12,551	-7,124	-0.6	-0.4	-0.5	-0.3	-0.7	-0.4
1998	-13,178	-11,107	-0.7	-0.6	-0.8	-0.6	-0.7	-0.6
1999	-11,728	-4,999	-0.6	-0.3	-0.6	-0.3	-0.6	-0.3
2000	-10,615	-9,136	-0.5	-0.5	-0.5	-0.5	-0.6	-0.5
2001	-7,471	-12,379	-0.4	-0.7	-0.5	-0.7	-0.4	-0.6
2002	-14,726	-18,414	-0.8	-1.0	-0.9	-1.1	-0.8	-1.0
2003	-18,127	-17,960	-1.0	-1.0	-1.0	-1.0	-1.0	-1.0

2004	-10,457	-12,710	-0.7	-0.7	-0.8	-0.8	-0.6	-0.7
2005	-13,989	-11,160	-0.9	-0.7	-1.1	-0.8	-0.8	-0.6
2006	-10,846	-11,442	-0.8	-0.6	-0.9	-0.6	-0.6	-0.6
2007	-10,757	-9,493	-0.7	-0.6	-0.8	-0.6	-0.6	-0.5
2008	-9,186	-8,479	-0.7	-0.5	-0.8	-0.6	-0.5	-0.5
2009	-5,623	-9,284	-0.5	-0.6	-0.7	-0.7	-0.3	-0.5
2010	-7,392	13,420	-0.6	0.7	-0.8	0.7	-0.4	0.7
2011	117	-6,225	0.0	-0.4	0.0	-0.5	0.0	-0.3
2012	-6,388	-4,161	-0.4	-0.3	-0.5	-0.5	-0.4	-0.2
2013	-1,659	-2,925	-0.2	-0.3	-0.3	-0.4	-0.1	-0.2
2014	-1,377	-768	-0.1	-0.2	-0.1	-0.3	-0.1	0.0
2015	1,134	3,339	0.0	0.1	-0.1	-0.1	0.1	0.2
2016	-1,106	-3,764	-0.1	-0.4	-0.2	-0.5	-0.1	-0.2

| Abstract |

Differences between Residence Population and Population
Projections(1970~2016)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Busan-

Kim, Dae-Rae

The official demographics in Korea include residence population, population projections and the population census. Among them, residence population is the largest, followed by the population projections, and the population census is the least common. However, unlike the national level, in regional dimension reversal can occur among these demographics.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pulation projections and the residence population in Busan.

In the period with an increased number of residence population, the population projection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residence population. It was in 1989 when a reversal occurred. Also it was in 1988 that the sex ratio trend was reversed was in 1988. When the population projections is larger than the residence population, the male population was more than or equal to the female population, and when the population projections was less than the resident population, the male population was less than the female population. In addition, 1989 was the turning period of the Busan population in and out of the city. Until 1988, transfers who moved in were higher than transfers who moved out, and from 1989 it was reversed.

In the period when the population projections was larger than the residence population, the difference was most common in 0~4 years in 1975 and 1985. The next most significant age group was 15~19 years old. It is

believed that many people who came to Busan due to education and job, but they delayed their birth registration and residence registration.

In the period when the population projections was smaller than the residence population, the age group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eries populations widened over time gradually increased and got older. Because Busan does not provide enough jobs for young people as well as adults, many people moved out to seek employment elsewhere, but their resident registrations remain in Busan. As such it is understood that more people live and work in other areas in actually.

Key Words: residence population, population projections, population census, Busan, migration